
1946년 전반 한국민주당의 재편과 우익정당 통합운동

윤 덕 영

(국사편찬위원회)

머리말

I. 한민당의 내홍과 김성수의 등장

II. 비상정치회의와 비상국민회의, 한민당의 대응과 한계

III. 우익정당 통합운동의 전개와 한민당의 대응

맺음말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20641).

● 투고일: 2016. 2. 10. ● 심사일: 2016. 2. 18. ● 게재확정일: 2016. 3. 7.

www.kci.go.kr

요약

본 연구는 동아일보 계열과 호남지역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일제하 주요 민족주의 세력은 물론 상당수 우파 사회주의 세력까지 망라하여 결성된 한민당이 송진우 사후, 어떠한 과정과 분란을 경과하면서 김성수 수석총무체제로 재편되었는가, 비상정치회의와 비상국민회의, 그리고 민주의원이 조직되는 일련의 정치과정에 한민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는 무엇인가, 한독당 중심의 우익정당 통합운동에 한민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그를 둘러싼 내부 분란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재편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송진우가 죽자 당권을 둘러싸고 한민당내 분란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한민당의 비주류인 우파 사회주의 세력과 진보적 민족주의 세력들의 대표적 인물로 임시 당대표를 맡고 있던 원세훈이었다. 1946년 1월 8일 한민당은 자기 당대표가 합의한 4당 코뮤니케를 부인하는 성명을 서둘러 발표한다. 이는 당권 향배와 관련하여 임시 당대표였던 원세훈에 대한 견제도 있었다. 한민당 주도세력은 김성수를 후임 수석총무로 선임하여 당권 도전에 적극 대응하였다.

1945년 12월 우익 진영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고립되었던 이승만은 1946년 초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의원이 조직되는 일련의 정치과정에서 미군정의 지원 아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임정 주도세력은 반탁운동의 높은 열기를 바탕으로 한민당과의 협력을 파기하고 독자적인 정계통합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1945년 우익세력 중에 가장 강력한 정당이었던 한민당의 존재감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승만과 김구가 주도하는 정치과정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한민당 간부였던 정노식의 탈당은 한민당내 우파 사회주의 세력의 동향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한민당의 한계가 드러나는 최초의 파열이었다.

민주의원이 결성되면서 임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제1차 미소 공위가 임박해지면서 임시정부 수립 문제가 가시화되자, 한독당을 중심으로 우익정당 통합운동이 전개되었다. 통합교섭 과정에서 한독당은 한민당과 국민당, 신한민족당의 3개 정당이 무조건 해체하고 한독당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식을 주장하였다. 한민당은 당명과 정강정책에 대해서 한독당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였지만, 흡수 통합과 간부 인선에 있어 한독당 독주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였다. 한민당은 자신의 구축해놓은 세와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런 반발은 단지 한민당내 주류파나 보수 세력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고, 비주류나 진보세력도 비슷하였다. 김성수는 당 수석 총무로서 당의 대표하는 입장이었지만, 그가 대표로 가서 받아들인 통합 안이 당내의 논의과정에서 부결되는 수모를 겪었다. 주류파의 유력 인물인 김병로도 같이 대표로 참석했기 때문에 그 타격은 더 컸다. 통합 부결 사태는 권위를 가지고 당을 이끄는 리더쉽이 한민당내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

주제어: 한국민주당, 한국독립당, 국민당, 김성수, 김병로, 원세훈,
정노식, 김구, 이승만

머리말

한국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국내로 전해지면서 정국이 크게 요동치던 1945년 12월 30일,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의 초대 수석 총무로 당을 주도했던 송진우가 암살당했다. 반탁문제로 진국에 소용돌이가 치던 시기였던 관계로 그가 차지하던 정치적 위상에 비해, 그의 죽음은 크게 주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당시 우파 내 최대 정치세력이었던 한민당은 재편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한민당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주·자본가 정당, 민족운동의 역사성이 없는 친일세력의 정당, 미군정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동적 세력, 이승만을 지지하다가 결국에는 버림받은 정치세력 등으로 파악하는 인식과 경향이 아직도 상당수 남아있다. 이런 인식은 한민당에 대한 연구가 그 전사를 이루는 일제하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연구에 비해 빈약하기 때문이었다. 많은 연구들에서 한민당을 다루고 있음에도 개설적 인식 수준이며, 본격적인 분석은 적은 편이다.

한민당에 대해 선구적이면서 기본적 인식을 제공한 것은 심지연의 일련의 연구이다.¹⁾ 그는 한민당의 결성과정과 주요활동을 포괄적으로 개괄하고, 주요 관련자들을 학연(유학경력), 사회활동 영역(경력), 출신 배경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더불어 정치노선에 대한 일정한 해명도 시도하였다. 그러나 한민당에 참여한 인물들의 일제하 활동에 대한 이해의 한계로 구체적인 분석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에 박태균은 일제하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일정하게 수용하고 한민당내 여러

1) 심지연, 1982, 『한국민주당연구』 I, 풀빛; 1984, 『한국현대정당론-한국민주당연구』 II, 창작과비평사.

세력과 인물들의 일제하 활동과 연관시켜 살펴보았다. 그는 한민당이 김성수 계열 및 기독교 계열의 주류와 원세훈, 김약수, 김병로의 비주류로 구분된 정당이었고, 1946년 좌우합작 7원칙을 계기로 비주류가 한민당을 이탈함으로써 한민당의 성격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2) 한민당이 단일한 정당이 아니며 시기에 따라 성격이 변화하였다는 점을 밝힌 것은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일제하 민족운동 및 우파세력에 대한 인식의 한계로 그 인과관계와 사실 인식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한편 한민당의 주요 인물이었던 장덕수 분석을 통해 한민당을 살펴본 연구로는 심재욱과 최선웅의 박사학위논문이 있다. 3) 장덕수가 능력있는 인물임에는 분명하지만 일제하 민족주의세력의 운동과정에서나 해방 후 한민당의 활동에서나 중심적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를 통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일제하 민족주의세력 및 해방 후 한민당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은 동아일보계열이나 호남정치세력에 대해, 그리고 한민당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 김성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과 이들 세력의 실질적인 정치 지도자였던 송진우의 독자적 활동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김성수는 일제하 민족운동 일선에 실제적으로 나선 적이 거의 없었다. 그가 실제 정치활동에 나선 것도 8·15직후부터가 아닌 송진우가 죽은 이후인 1946년 초부터였다. 그 이전까지 그는 교육자로서의 활동에 머물러 있었고 정치적 활동은 대단히 제한되었다. 한민당의 주류를 이루었던 동아일보 계열과 호남정치세력이 정치적으로 형성되는 1920년대 초반 이래 1945년 말까지 이들 세력

2) 박태균, 1994, 「해방직후 한국민주당 구성원의 성격과 조직개편」, 『국사관논총』 58집.
 3) 심재욱, 2007, 「설산 장덕수의 정치활동과 국가인식」, 동국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최선웅, 2013, 「장덕수의 사회적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활동」, 고려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의 실질적 최고 지도자이자 이들을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묶는 구심점은 김성수가 아닌 송진우였다. 그렇지만 송진우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윤덕영의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결성 초기의 한민당의 조직구성과 성격에 관련해서 윤덕영은 일제하 동아일보 계열 및 국내 민족운동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8·15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이하 인공) 수립 선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그에서 드러난 재건파 조선공산당 세력의 신국가 건설에서의 체계 모니 전취를 직접적 계기로 천도교 세력을 제외한 일제하 국내 민족주의 운동 세력의 다수는 한민당으로 집결한다. 창당 초기 한민당은 일제하 주요 민족운동 세력 중 동아일보 계열과 호남지역 정치세력이 주도하고, 기독교계열 양대 세력 중 하나인 홍사단·수양동우회 계열 및 서북지역 정치세력이 다음으로 참가했으며, 또 다른 세력이었던 동지회·홍업구락부 계열 및 기호지역 정치세력의 일부도 가담하여 결성되었다. 그밖에 경상도를 비롯한 각 지역의 민족주의 세력과 원세훈, 김약수, 정노식, 서정희 등의 1920년대 후반이후 ‘좌익 사회민주주의’로 불리던 우파 사회주의 계열의 인물들도 적잖이 포괄하는 정당으로 결성되었다. 결성당시 한민당(발기회 포함)과 자매단체인 국민대회준비회 부장급 이상 간부 36명중 약 90% 이상이 민족운동 관련자들로, 초기 한민당은 보수적 정치 지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우파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광범하게 참가하는 정치연합 정당의 성격을 일정하게 갖고 있었다.⁴⁾ 때문에 8·15 직후 해방공간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등장한 사

4) 윤덕영, 2011(a), 「1945년 한국민주당 초기 조직의 성격과 주한미군정 활용」, 『역사와 현실』 80, 252~269쪽. 또한 초기 한민당의 정강 정책 및 그 성격에 대해서는 윤덕영, 2010, 「일제하·해방직후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과 국가건설노선」 연세대학교

람들을 제외하고 일제하 이래 민족운동을 해왔던 민족주의 세력들을 놓고 볼 때, 1945년에 한정하여 본다면 한민당은 질과 양에서 여타 우익 정치세력을 압도하였다.

한편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한민당 주도세력은 해방 직후부터 송진우가 앞장서서 주장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절대지지론’에 연장선상에서 적극적 정치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공산주의 세력과의 협력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제는 민족주의 세력의 주도권을 사전에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런 전제에서 8·15직후 급격히 확산되는 공산주의세력 주도의 신국가 건설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익 헤게모니 하에 광범한 좌우세력을 망라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매개로 국내의 조직적 기반은 거의 없지만 민족운동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 그것도 1940년대 들어 한국독립당(이하 한독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이 연합하면서 좌우연합 정권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주도권은 한독당에 있는 임정에 주목하였다. 임정을 내세워 우익 주도하에 광범한 좌우세력을 망라하면서 신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 임정지지론의 골자였다.⁵⁾

한민당 세력들은 초기 미군정의 정치고문과 군정요원의 부족을 틈타 미군정 행정권 및 경찰권, 사법권 등의 요직에 적극 진출하여 1945년 말이면 미군정의 하위 권력을 사실상 장악하여 갔다. 그리고 이런 힘을 배경으로 임정 요인들이 귀국한 것을 전후하여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한민당 주도세력은 미 국무부의 한반도 신탁통치 방침 및 소련 점령 하에 우익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북한 정세들을 우려 속에서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317~326쪽 참조.

5) 윤덕영, 2011(b), 「송진우 · 한국민주당의 과도정부 구상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지론」, 『한국사학보』 42, 253~277쪽.

신탁통치 방침이 결정되기 이전인 12월초부터 이미 열강의 신탁통치 방침에 반대하여 ‘즉시독립 승인’, ‘38도선 즉시 철폐’ 등의 민족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⁶⁾

그들은 미군정과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본격적 정계개편운동에 착수한다. 그들은 당면 과도정부의 역할을 임정이 전담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막대한 정치 자금을 임정 주도세력에게 지원하며 그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다양한 중간파 및 공산당을 제외한 좌익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민족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좌우 연합과 민족통일을 위한 친일파·민족반역자 청산 문제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제기하였고, 좌익세력의 ‘진보적 민주주의 주장’ 중 일부를 수용한 사회경제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정계개편운동은 국민대회준비회의 1946년 1월 10일 ‘국민대회’ 개최 주장으로 집약되어 나타났는데, 이들의 활동은 임정 주도세력과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물론 그들의 정계개편 주장은 한편으로는 조선공산당(이하 공산당) 세력을 여타 좌익세력 및 중간세력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약화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임정을 내세워 한민당 주도세력이 실제 권력을 장악하려는 헤게모니 투쟁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⁷⁾

그렇지만 이런 활동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른 소위 ‘신탁통치’ 국면이 일반의 예상과 달리 급박히 도래하고, 그 와중에서 한민당의 핵심이자 정계개편 운동을 주도하던 송진우가 의문의 암살을 당하면서 무산되게 된다. 그리고 한민당 주도세력과 임정 주도세력간의 협력관계도 순식간에 막을 내리고 도리어 갈등관계로 변모하고 만다.

6) 윤덕영, 2011(c), 「주한미군정의 초기 과도정부 구상과 송진우·한국민주당의 대응」, 『한국사연구』 154, 216~221쪽.

7) 윤덕영, 2014, 「미군정 초기 정치 대립과 갈등 구조의 중층성-1945년 말 한국민주당 주도세력의 정계 개편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5, 268~286쪽

일제하 여러 계열의 민족주의 세력이 연합하여 결성된 한민당은 해방 직후 신국가 건설의 국면에서 당의 구심력을 확립해 당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당의 조직적 결합과 정치적 구심의 형성, 당의 운영이 이념적 지향이나 조직적 운영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송진우의 개인적 정치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⁸⁾ 때문에 송진우가 죽게 되면서 한민당의 당내 지형과 활동 양상도 크게 변화하면서 재편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당연히 한민당의 성격변화도 일어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1946년의 전반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I. 한민당의 내홍과 김성수의 등장

송진우가 죽자 그를 대신하여 한민당을 이끌어 갈 인물로는 여러 인물이 논의되었다. 가장 유력하게 논의된 인물은 김성수이었지만, 그 외에도 김병로, 원세훈, 백남훈 등도 대두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는 내외의 신망이 있고, 1930년부터 1931년 신간회 해소때까지 신간회 중앙지도부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었다. 송진우와는 1910년대 일본 유학시절부터 일제 말까지, 그리고 해방 후까지도 자타가 공인하는 오랜 동지이자 아주 밀접하게 지냈던 호남출신 인물로 범 동아일보계로 볼 수 있는 인물이었다.

한편 원세훈은 함경도 출신으로 연해주 대한국민의회 상설의원장으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기여했지만 곧 갈라섰고, 임정과 해

8) 윤덕영, 2011(a), 앞의 논문, 252~269쪽.

의 독립운동 세력의 재편을 위한 국민대표회의 소집에 앞장서서 창조파의 대표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민족유일당론을 앞장서 제기하고 안창호와 협의하여 1926년에는 민족유일당 북경축성회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1928년 체포 후 국내로 압송되었고, 1930년 출옥 후에는 언론 활동을 하였다. 8·15 직후에는 가장 먼저 주변사람들을 모아 고려민주당을 만들 정도로 당파성도 강했고,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다.⁹⁾ 그는 한민당의 비주류인 우파 사회주의와 진보적 민족주의 세력들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원세훈은 1945년 12월 한민당 주도 정계개편 운동과정 중에서는 송진우와 함께 한민당을 대표해서 여러 회합에 적극 참가했다.¹⁰⁾ 그리고 송진우 사후 임시 당대표를 맡고 있었다.

당권의 향배와 관련하여 김병로는 일찌감치 수석 총무를 사양하였지만 원세훈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내 각 계파별 대립과 분란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¹¹⁾ 이런 양상이 한민당의 활동에 영향을 준 것이 1946년 1월 7일의 ‘4당 커뮤니케’를 둘러싼 한민당의 대응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46년 초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우파 세력과 좌파 세력은 ‘신탁

9) 원세훈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송남현, 1990, 『시베리아의 투사 원세훈』, 천산산맥; 박태균, 1994, 앞의 논문; 강만길·성대경 엮음, 1996, 『한국 사회주의운동 명명사전』, 창작과비평사, 292~293쪽; 김재명, 2003, 「울 곁은 민족정신 지닌 시베리아 투사」, 『한국현대사의 비극』, 선인; 조규태, 2012, 「원세훈의 임시정부 수립·변혁 활동과 민족유일당 운동」, 『승실사학』 29; 전성호, 2012, 「해방 이후 원세훈의 좌우합작운동과 정치활동」, 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0) 1945년 12월 송진우 주도의 정계개편운동에서 송진우는 의식적으로 원세훈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여러 모임에 한민당의 대표로 같이 참여했다. 이는 원세훈이 정계개편운동의 핵심조직으로 부상한 국민대표준비회의 부위원장이기도 했고, 정계개편운동 과정에서 광범한 좌우 세력을 망라하기 위해 좌익이 주장하던 ‘진보적 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청산 등을 적극 주장하는 등 진보세력의 입지와 주장을 전술적으로 배려했기 때문이었다. 윤덕영, 2014, 앞의 논문, 281~293쪽.

11) 서상일은 송진우 사후 한민당 당수를 둘러싸고 3파가 준동하였다고 한다. 서상일, 「인촌 김성수 동지는 왜 위대하다 하는가」, 『신생공론』 1955. 6·7합병호; 인촌기념회편, 1976, 『인촌 김성수전』, 인촌기념회, 497쪽.

통치 반대'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총체적 지지'로 갈라져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이러한 대립은 삼상결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부와 함께 당면의 과도정부 수립에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었다. 남북의 공산당 세력은 삼상결정안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서 삼상결정안 전체에 대한 총체적 지지노선을 주장하였다. 북한에서는 삼상결정안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세력에 대한 전면 공격이 시작되었고, 남한에서는 반대의 공격이 시작되었다.¹²⁾

이런 가운데 임정내 진보세력인 김원봉과 김성숙, 그리고 인민당 등의 주선에 의해 한민당, 국민당, 인민당, 공산당간의 4당 회담이 열리게 되고,¹³⁾ 그 결과로 1월 7일 4당 대표가 합의하여 '4당 커뮤니케'가 발표되었다.¹⁴⁾ 4당 커뮤니케는 3상회의 결정을 둘러싸고 찬탁과 반탁으로 나뉘어진 정치세력들이 최초의 합의점을 찾았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합의내용은¹⁵⁾ 3상회의 결정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 합의한 것이 아니었고,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었다.

당장 다음날부터 공동성명에 대해 좌·우는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국민당의 안재홍은 4당 공동성명에 대해 담화를 발표하여 “우리에게 신탁통치의 굴레를 끼우려고 하는 것은 단연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대정당 대표 간담에서 신탁통치는 국제현장에 의하여 우리에게 疑懼되는 조건임으로 장래에도 수립된 우리 정부를 통하여 자

12) 윤덕영, 2000, 「1946년 전반 좌익세력의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대응과 ‘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구상’, 하현강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편,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 해안, 857~885쪽.

13) 자세한 경과는 남광규, 「신탁정국기 (1946. 1) 정당협력의 실패와 임정의 약화」, 『한국정치학회보』 39집 1호, 2005, 162~166쪽.

14) 『중앙신문』, 『서울신문』 1945. 1. 9.

15)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대하여 조선자주독립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적 발전을 원조한다는 정신과 의도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信託(국제현장에 의하여 疑懼되는 신탁제도)은 장래 수립될 우리 정부로 하여금 자주독립의 정신에 의하여 해결케 함”

주독립의 정신에 基하야 이것을 배재케 하자는데 그 중점이 있다. 일반은 결코 이점을 오해할 바 아니다”라고 설명하였다.¹⁶⁾ 곧 공동성명의 내용은 엄밀히 살피면 반탁 주장이라는 것이다. 임정 외교부장 조소앙도 4당 공동성명에 대해 “각 당간의 의견이 다각적으로 일치점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각세력이 공동전선으로 나갈 계단이 십분 완성된 것으로 경하하는 바”라면서 “우리는 탁치문제를 무조건 반대하여도 안되고 무조건 지지하여도 안되며, 탁치의 정체를 잘 인식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우리는 탁치라는 제도는 반대하나 연합국의 우의는 환영하여야 한다.”¹⁷⁾라고 하여 탁치에 대한 반대로 공동성명을 이해하였다. 우익 쪽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한 정도로 4당 코뮈니케의 내용은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4당 코뮈니케는 3상회의 결정에 대한 논쟁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그 애매한 부분을 정리하고 민족통일전선에 대한 입장을 모아가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었다.

그런데 4당 코뮈니케에 대해 한민당은 1월 8일 이를 부인하는 성명서를 긴급 발표하였다.¹⁸⁾ 이에 대해 한민당 선전부장 함상훈은 8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에서는 대표로 참석했던 김병로와 원세훈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들었는데, 그 문안에 “반탁을 주장하는 明文이 결여되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탁치를 수락할 수도 있게 되었기에 그 부당함을 지적하자, 대표로 출석했던 김병로 역시 이를 시인했으므로 동 조항을 불승인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해명했다.¹⁹⁾

한민당의 이런 발표는 당 공식대표가 가서 합의한 사항을 뒤엎는 것이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더구나 당의 대표로 참석했던 원세훈은 송진우 사후 한민당의 임시 당수 역할을 맡고 있었고, 김병로 역시 당의 최고

16) 『중앙신문』 1946. 1. 9.; 『신조선보』 1945. 1. 9.

17) 『중앙신문』 1946. 1. 9.

18) 『동아일보』 1945. 1. 9.; 『중앙신문』 1945. 1. 9.

19) 『중앙신문』 1945. 1. 9.

위급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인민당 여운형의 직계인 이여성은 4당 공동 성명서를 김병로가 기초하여 성문화하였고, 각 당 대표가 확인서명까지 했는데,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원세훈과 김병로의 체면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²⁰⁾ 또한 공동성명의 내용에 반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신탁’에 대해 ‘국제현장에 의하여 疑懼되는 신탁제도’라고 하고 있고, 이를 자주독립의 정신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하고 있어 있어, 신탁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면 한민당이 긴급 결의로서 당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깨버리는 큰 무리수를 둘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당이 긴급결의로서 이를 부정한 것에는 몇 가지 사정이 있었다. 우선 이미 지적된바와 같이 4당 커뮤니케에 대해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이 이를 3상 회의 결정에 대한 ‘전면적 지지’로 선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¹⁾ 다음으로는 앞서 언급한 송진우 사후 한민당의 당권 향배와 관련된 사정이 있었다. 원세훈은 임시 당대표로 당내 최고위급 인물이었지만 일제 하 민족주의 세력에서도, 그리고 한민당에서도 주류적 위치가 아니었다. 동아일보 계열도, 홍사단-수양동우회 계열이나 동지회-홍업구락부 계열도 아니었다. 지역적으로도 함경도출신이었다. 그리고 그는 송진우 사후 당의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임정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송진우가 세웠던 임정 절대 지지라는 당론과 다른 주장을 가장 먼저 하고 있었다. 그는 1월 2일 당 간부회의에서 “한민당이 임정을 절대지지하고 한테는 정강 정책도 물론이러니와 그보다도 국제적으로 승인을 얻기 용이하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내외의 정세는 一轉하여 탁치문제가 전해진 오늘에는

20) 『중앙신문』 1945. 1. 9.

21) 최선웅, 2014, 『한국민주당의 미소공동위원회 대응과 활동』, 『한국사학보』 54, 262쪽

전민족의 힘을 새로 결집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자”라고 주장하였다.²²⁾ 그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면서도 1945년말 이래 민족문제를 제기하며 임정을 중심으로 한 제 정치세력의 결집, 38도선 철폐 및 즉시독립 주장, 반소반공적 입장의 견지 등 기존 노선, 그것도 송진우가 세운 노선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당내에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한민당의 4당 커뮤니케 부인 성명은 송진후 사후 당내 당권을 둘러싼 한민당내 미묘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지만 그 파장은 컸다. 당시에도 즉시 자주독립에 대한 열망은 민족문제를 고민하는 좌·우 세력의 공통된 바람이었음으로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반탁운동을 전개하여야 하지만, 미·소 양군이 진주하고 그들의 간섭을 물리칠 힘이 없는 이상 그들과의 일정한 타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3상결정안이 신탁통치와 함께 조선인의 과도민주주의정부 수립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립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특히 신탁통치 국면에서 3상결정안에 대해 임정 세력의 전면 배격 주장과 공산당의 총체적 지지 주장사이에 갈등하고 동요하는 수많은 세력과 사람들이 존재하였다.

그렇지만 한민당의 부인 성명은 한민당이 3상결정안을 둘러싼 중간적 입장의 다양한 제 견해를 배격하고 극단적 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외에 천명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이는 창립초기 상당한 숫자의 사회주의자들을 포괄하여 정치연합적 성격을 갖고 결성된 한민당의 선택으로서 어울리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주장이었다. 최선용은 당시 한민당 태도에 대해 3상회의 결정을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단계적이고 기능주의적으로 해석하였고, 이는 3상회의 결정의 전면적 거부를 주장하던 이승만·김구 세력과 분명한 차이를 가지는 것이

22) 『중앙신문』 1946. 1. 4.

라고 해석하였다.²³⁾ 한민당과 김구세력, 그리고 이승만 세력이 3상회의 결정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것은 분명하고, 한민당의 3상회의 결정에 대한 기능주의적 해석이 1946년 2월 미소공동위원회(이하 미소공위) 예비회담이 끝나고 3월 미소공위 본회담이 가까워지면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1월초의 시점, 특히 4당 커뮤니케를 부정하는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경위야 어찌든 한민당의 4당 커뮤니케 부인 성명은 한민당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당시 정국을 경색시키는데 일조하였다.

한민당의 부인성명 후에도 정당간의 협상은 인민당의 중재로 계속되었다.²⁴⁾ 4당 대표회의가 신한민족당이 참여하여 5당 대표회의로 확대되었고, 1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친 회합이 있었다. 인민당은 4당 커뮤니케에 대해 우익 진영이 반대하자 그에 대한 수정안을 제기하였다. 수정안은 4당 커뮤니케 중 2항의 “신탁은 불원 수립되는 임시정부가 자주독립의 정신에 기하여 이를 해결케 함” 중 ‘해결’을 ‘배격’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삼상결정의 총체적 지지를 주장하는 공산당이 이를 반대하였다.²⁵⁾ 공산당은 3상결정안에 대한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였다. 한민당으로서는 자신들의 대표가 합의한 4당 커뮤니케보다 훨씬 민족주의세력의 입장을 반영한 인민당의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들 역시 중간 세력과 진보적 세력을 끌어들이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5당 대표회의는 이를 자신들이 주도하는 비상정치회의의 예비회담으로 하려는 임정 측의 주장과 비상정치회의를 부정하는 공산당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무산되었다.²⁶⁾ 이렇게 해서 좌·우 세력의 협상은 무위로 돌

23) 최선웅, 2014, 앞의 논문, 263쪽.

24) 이여성, 1946, 「통일공작과 인민당」, 조선인민당편, 『인민당의 노선』, 신문화연구소, 64~68쪽.

25) 조선인민당편, 앞의 책, 66쪽.

26) 송남현, 1975, 『해방30년사』, 성문각, 219쪽.

아가고 정국은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세력, 좌익과 우익이 각기 병렬하는 체제로 바뀌어 갔다. 중간의 수많은 세력들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이를 계기로 찬탁·반탁을 둘러싼 각 정치세력의 대립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4당 코뮤니케가 합의된 날인 1월 7일 오후 4시 한민당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김성수를 송진우 후임 수석총무로 본인의 사전 양해 없이 선임하였다.²⁷⁾ 그리고 1차로 장덕수가, 2차로 서상일과 백관수가, 3차로 김병로가 대표로 차례로 가서 취임을 거부하던 김성수를 설득하였다.²⁸⁾ 그런데 이들의 면면을 보면 장덕수가 비록 동지회에 가담하여 이승만과 일정한 관련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두 일제하 이래 동아일보 계열과 호남출신의 인물들이었다. 곧 이는 이들 당 주류파들이 원세훈 등의 당권에 대한 도전과 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까지 당 외곽에 있었던 김성수의 대두는 어찌 보면 필연적이었다. 한민당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김성수 집안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1945년 말 임정에 대한 자금지원과 애국금헌성회를 결성했을 때 드러난 탁월한 송진우의 정치자금 동원 능력에 비해,²⁹⁾ 송진우가 사라진 이상 그를 대신해 그 역할을 담당할 인물은 한민당내에는 현실적으로 없었다. 김병로도 일제하 신간회를 이끌었던 경험도 있고, 이념적으로나 정치성향으로나 내외의 신망이 두터웠기 때문에 유력한 인물이었지만, 정치자금 문제와 정치 리더십의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김성수는 일제하 이래 정치사회 운동 전면에 나선 적이 없이 주로 지원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공

27) 『동아일보』 1946. 1. 9.; 『서울신문』 1946. 1. 9.; 『중앙신문』 1946. 1. 9.

28) 김병로는 “인촌 때문에 당이 깨어져도 좋단 말이요? 당이 깨어지면 지하의 고하가 인촌더러 무어라고 할 것 같소?”라고 설득하여 김성수의 승낙을 얻어냈다고 한다. 이경남, 1981, 『설산 장덕수』, 동아일보사, 337~338쪽.

29) 윤덕영, 2014, 앞의 논문, 276~280쪽.

산세력을 제외하고는 정치적으로 적이 거의 없었으며, 성품이나 인간관계에서 무난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민당이 부딪친 가장 시급한 정치자금 문제를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다. 김성수는 동생인 경성방직 사장 김연수에게서 한민당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을 약속 받은 후에 한민당의 수석총무에 취임하였다.³⁰⁾

김성수의 취임으로 송진우 사후 당권을 둘러싼 한민당의 내분은 봉합되었다. 당권을 둘러싸고 대립하던 한민당내 각 세력들은 정치자금 문제 해결 능력이나 정치 리더십에 있어 무난한 김성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대지주이자 대부르주아인 김성수의 전면 등장은 당내 진보적 세력과 우파 사회주의 세력의 거부감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지 않았다. 더군다나 정치 사회운동 경험이 일천하고, 정치적 술수와 능력이 떨어지는 김성수는 송진우가 가졌던 정치력과 리더십, 추진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II. 비상정치회의와 비상국민회의, 한민당의 대응과 한계

모스크바 삼상결정에 따른 임시민주정부의 수립과 이를 위한 미소공위의 개최가 가시화 되면서,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민당 주도세력이 추진하던 1월 10일 국민대회 개최를 정점으로 한 정계개편운동은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국민대회 자체는 무산되었지만, 우익세력 주도하에 정치세력을 단일한 세력으로 결속시키려는 흐름이 무산된 것은 아니었다. 가장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간 것은 김구 중심의 임정주류 세력이었다. 모스

30) 인촌기념회편, 1976, 앞의 책, 497쪽.

크바 3상 결정이 알려진 직후 엄청난 반탁운동에 고양된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정 주류세력은 국자 포고로 미군정청을 접수하여 정권을 이양 받으려고 했지만, 이는 미군정에 의해 사실상 쿠데타로 취급되면서 쉽게 진압되었다. 힘의 한계를 절감한 김구는 1946년 1월 4일 비상정치회의 소집과 임정 확대 강화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³¹⁾ 김구는 통일공작에 대한 포고를 밝힌다면서 9월 3일에 발표한 임시정부 당면정책 6항에 근거해서 비상정치회의, 즉 “국내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각 계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단체, 각 지방 대표와 저명한 각 민주 영수회의”를 즉시 소집할 것, 그리고 비상정치회의에서 과도정권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임시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며 각계 영수를 임정에 망라하여 임정을 확대 강화할 것, 또한 과도정권이 수립되면 임시정부는 해체되며, 과도정권은 국민대표 대회를 소집해서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를 원칙으로 한 정식정권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이런 김구의 성명 내용은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망라하여 비상정치회의를 구성하여 과도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점에서는 민족통일전선의 방침으로 의의가 있는 것이고, 임정이 1945년 12월에 송진우의 한민당 주도세력과 합의하여 추진하던 정계개편운동과 그 목적에서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비상정치회의의 구성과 중복되게 각계 영수를 임정에 망라하여 임정을 확대 강화하겠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점이었다. 이런 방침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노정할 소지가 있었다.

첫째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세력을 망라해야 할 비상정치회의를 협소한 임정의 확대·강화로만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국내외의 각 계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단체, 각 지방 대표와 저명한 각 민주 영수회의”으로서의 비상정치회의를 상정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이를 곧바로 임정의

31) 『서울신문』 1946. 1. 5. 『자료 대한민국사』 1, 764~766쪽.

확대·강화로 연결시키면 이는 비상정치회의를 특정 정치세력의 외연 확대방안으로만 협소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임정에 직접 가담하기가 어려운 정치세력들이 다수 존재하는 당시의 현실에서 이런 방침은 비상정치회의의 소집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³²⁾ 이렇게 되면 통일전선으로서의 존재의의가 사라질 뿐 만 아니라 광범한 정치세력을 결합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둘째는 비상정치회의와 임정 의정원, 그리고 비상정치회의에서 수립된 과도정권과 임정이 사실상 구별이 되지 않는 동일한 것이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현실적 진행을 놓고 볼 때, 각계 영수들을 이미 임정에 망라했기 때문에 비상정치회의에서 수립될 과도정권은 임정을 과도정부로 추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임정 의정원 의원들이 자동적으로 비상정치회의의 의원으로 전화하게 된다. 이는 임정의 법통을 과도정부가 계승하는 점을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각계 영수들이 임정에 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난점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국가건설운동의 중층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 신국가 건설은 단순히 정부의 수립, 정권의 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이념과 노선을 가진 정치세력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근대적 민주주의 국가체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여기서 정치협상기구 또는 민주적 의회의 존재 의의와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비상정치회의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밟기 힘든 비상한 시국에 만든 민족통일전선이자, 각계 각층의 대표들이 모여 국사를 논의하는 의회 준비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임정이라는 틀로 제한시켜 버리면 의회의 틀은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32) 임정의 비상정치회의의 구상은 ‘임정 확대 강화’를 지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좌익진영을 끌어들이는데 한계를 가졌다. 이용기, 1997, 「1945~48년 임정세력의 정부수립 구상과 임정법통론」, 『한국사론』 38, 186쪽.

이런 점에서 김구 등 임정 주도 세력의 구상은 임정의 범통론을 강조하면서 임정의 조직 확대만을 추구한 방침이었다. 이는 국민대회준비회 결성과 한민당 주도 정계개편운동 과정에서 표출되었던 1945년 시기 한민당과 송진우의 구상, 즉 임정은 과도정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신국가의 의회 준비조직으로서 국민대회준비회의 활동으로 국민대회를 통해 신국가의 정식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려 했던 구상과는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³³⁾

그렇지만 반탁운동 과정에서 급격히 고조된 대중들의 임정의 지지에 고무된 임정 주도세력은 1945년 12월 정계개편운동 과정에서 보조를 같이했던 한민당 주도세력과의 협력 관계를 무산시키고, 임정범통론을 앞세워 자파만의 국가건설 방략을 추진했다. 송진우가 암살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제어나 협력관계 복원도 불가능하였다. 이렇게 1946년 1월초 발표된 임정 주도세력의 비상정치회의 소집과 임정 확대 강화 방침은 각계각층 대표를 망라한 비상정치회의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임정의 틀안에 들이려 스스로를 제한해 버릴 위험성을 갖고 있었다. 또한 민족통일전선에서의 주도권 행사를 대단히 형식적으로 접근하고 임정의 범통만을

33) 윤덕영, 2011(b), 앞의 논문, 265~269쪽. 송진우는 임정에 참여하고 있던, 있지 않던 상관없이, 그리고 임정세력과 이념과 노선이 같던 다르던 상관없이 광범한 좌우의 정치세력을 ‘국민대회’를 통해 일단 망라하고, 이를 장래의 의회 준비조직으로 발전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국민대회에서 과도정부를 구성하되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임정이 과도정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도록 추대하고, 민주적 의회에서 다수를 이루는 세력이 정부를 구성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듯이 이후 정식으로 소집될 국민대회에서 각계의 정식 대표를 선출하여 이들 중 다수를 이루는 세력이 정식 정부를 구성하면서 임정을 자연스럽게 해소시킨다는 구상이었다. 이런 구도는 쉽게 비유하면 1947년초 남조선 과도입법의원과 남조선 과도정부의 구도와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임정이 남조선 과도정부의 역할을 맡는 것이고, 국민대회준비회는 과도입법의원의 산파가 되는 것이다. 송진우는 당장의 과도정부 역할을 임정세력이 담당하더라도 그 역할은 정식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의 과도적 역할에 머무를 것이고, 국내의 조직적 기반이 부재한 임정세력이 앞으로 성립될 정식 정부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국내 기반이 미약하고 미군정에 독자적으로 대항할 힘이 거의 없는 그들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었다.

1946년 1월, 5당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민당과 국민당, 신한민주당의 우익 3당을 중심으로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안재홍은 “경성에 있는 민족주의 3정당과 평양에 있는 조선민주당까지 협동하고, 다른 해외에서 들어온 혁명단체와 국내에 있는 종교 제집단과 연결하여, 임정에서 소집하는 비상정치회의를 지지하되, 이승만박사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회의의 사업을 거기에 합류시켜 비상국민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박사와 김구주석을 두 영수로 추대키로 중의가 일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³⁴⁾ 5당 회의 당시 한민당의 대표는 장덕수와 서상일 이었는데, 최선웅은 이 비상국민회의안이 장덕수의 머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³⁵⁾ 구체적 안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1945년 12월 내내 국민대회준비회를 기반으로 1월 10일 국민대회 개최를 준비해 왔던 한민당 주도세력에게 있어 모스크바 3상 결정이라는 ‘비상한 시국’에 ‘국민회의’를 소집한다는 생각은 이전의 활동과 연결되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한민당의 구상은 임정 주도세력이 추진하는 비상정치회의의 소집을 지지하고, 여기에 이승만의 독촉중협을 합류시켜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하는 것이었다. 1월 14일 한민당 수석 총무 김성수는 기자들과의 첫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에 있어서는 각당각파가 자아의 고집을 버리고 小異를 청산하여 대동으로 일치단결함에 있고, 이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겠으나 임시정부에서 지시한 바의 비상정치회의를 소집하도록 통일을 단행하는 좋을 줄 안다”고 하여³⁶⁾ 임정 쪽에 힘을 실어주었다. 김성수의 담화

34)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편, 1983, 『민세 안재홍선집』 2, 지식산업사, 91~92쪽.

35) 최선웅, 2013, 「장덕수의 사회적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활동」, 고려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50쪽.

는 이승만의 기분을 크게 상하게 하였고, 이승만은 돈암장으로 자신을 찾아온 김성수와 장덕수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렸다. 김성수와 장덕수 등 한민당 주류는 이승만을 설득하는데 주력했지만 여의치 않았다.³⁷⁾ 이때 한민당 주류와 이승만 세력이 일정하게 이해를 같이한 것이 1945년 12월 15일 제1차 회의 소집 이후,³⁸⁾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던 독촉중협 중앙집행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이었다. 한민당은 독촉중협 회의를 이승만을 설득하는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반면, 이승만은 이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력을 복원하려고 하였다.

1946년 1월 15일 개최된 독촉중협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성수, 장덕수, 원세훈, 백남훈 등 한민당 인물들은 비상정치회의와 독촉중협을 통합하여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하는 안을 제안하였다.³⁹⁾ 국민대회준비회 부위원장이었던 원세훈이 한민당에서 이전부터 추진해온 국민대회준비회와 독촉중협을 통합하여 비상국민회의로 가는 안을 제기하기도 하였지만,⁴⁰⁾ 국민대회준비회의 실세 송진우가 사라진 마당에 이 제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민당 주도로 비상국민회의안이 마련되었지만, 1월 17일 제4회 독촉중협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독촉중협과 비상정치회의의 통합문제의 전권을 이승만에게 위임하기로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⁴¹⁾ 그 양상이 변화하게 된다.

1월 18일 제5회 독촉중협 중앙집행위원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승만은 임정이 개인자격으로 환국하였고, 반탁운동으로 인하여 일부 위원이 군정당국에 오해를 산 것, 그리고 내부에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을 이유

36) 『동아일보』 1946. 1. 15.

37) 이경남, 앞의 책, 341~342쪽.

38) 제1차 독촉중협 중앙집행위원회를 둘러싼 이승만과 송진우의 경쟁과 대립관계에 대해서는 윤덕영, 2011(c), 앞의 논문, 208~216쪽 참조.

39) 우남이승만문서 편찬위원회편, 『우남 이승만문서 : 동문편』 13권, 205~225쪽

40) 우남이승만문서 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13권, 226쪽.

41) 우남이승만문서 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13권, 282~284쪽.

로 임정 주도의 비상정치회의가 정치세력을 통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독촉중협이 직접 각 정당과 단체, 유명 인사를 망라하여 자신이 회장이 되고, 김구가 부회장이 되는 국회같은 국민조직을 완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 안이 이미 김구 및 김규식, 조완구의 전폭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⁴²⁾ 한민당의 서상일이 임정의 비상정치회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몇 일의 여유를 가질 것을 요청하고, 백남훈이 1월 20일 개최 예정된 임정 비상정치회의 준비회를 기다릴 것을 주문하였지만, 이승만은 독립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묵살하였다. 안재홍이 조완구 임정 재무부장의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삼 확인하자 이승만은 그렇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이승만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김성수는 김구의 양해만 있다면 자신들은 이승만과 김구에게 전임하겠다고 말했다.⁴³⁾

이날 독촉중협은 비상국민회의로 개칭되었는데, 사전에 김구 및 김규식, 조완구의 전폭적 동의를 받았다는 이승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이승만의 과장과 허언에 말려 비상국민회의가 결성되었지만, 한민당 세력들은 이를 알면서도 제어할 수 없었다. 이승만은 임정의 비상정치회의 준비회가 결성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조직을 결성하여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치통합을 주도하려 하였다.

1월 20일 임정 주도로 비상정치회의 준비회가 18개 단체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회의에서는 독촉중협의 합류를 결의하였다. 그 전후로 김구를 비롯한 임정 주도 인물들에 대한 이승만측의 설득과 공작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비상정치회의와 독촉중협이 비상국민회의를 소집하는 형식으로 비상정치회의 준비회가 비상국민회의 준비회로 전환되었다. 이승만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주도했다.⁴⁴⁾ 이렇게 이승만과 김구의 연합

42) 우남이승만문서 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13권, 295~300쪽.

43) 우남이승만문서 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13권, 301~303쪽.

이 가시화되자 1월 23일 임정내 좌파를 대표하던 김원봉, 성주식 등의 조선민족혁명당과 김성숙의 조선민족해방동맹이 임정과 비상정치회의의 우익편향을 비판하며 비상정치회의 준비회를 탈퇴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⁴⁵⁾ 이들의 탈퇴는 비상정치회의를 중심으로 좌우의 정치세력을 망라하려던 김구 등 임정 주도세력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좌우 연립정부로서 임정의 위상을 무너트리는 것이었다.

2월 1일 우익 61개 단체를 망라한 비상국민회의가 발족하였다. 2월 13일에는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 28명이 발표되었고, 이는 미군정의 자문기관인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민주의원)으로 전환되었다. 굿펠로우 주도로 미군정은 이러한 일련의 정치개편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그들은 임정을 해체하고 미군정의 파트너로서, 또한 미소공위에 내세울 통일된 단체 구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 단체 구성 노력에 김구와 이승만은 협조할 것을 동의하였다.⁴⁶⁾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의원에는 처음부터 합류가 불가능했던 공산당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인민당과 독립동맹은 물론, 기존에 임정 중심으로 활동하던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민족해방동맹 등 중간적 성향의 좌파들도 상당수 배제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조직 결성을 주도한 것은 미군정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이었다. 이를 통해 1945년 12월 우익 진영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고립되어 가던 이승만이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임정 주도세력은 반탁운동의 높은 열기를 바탕으로 비상정치회의를 통해 독자적인 정계통합을 시도했지만, 사실상 실패하게 된다. 김구가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의원에서 부의장 직위에 오르지만, 대신에 일제하 민족운동의 상징

44) 정병준, 2005, 『우남 이승만연구』, 역사비평사, 525~528쪽.

45) 『자유신문』 1946. 1. 24; 『조선일보』 1946. 1. 24.

46) FRUS, 1946. Far East Vol. VIII, 김국태 옮김, 1984, 『해방 3년과 미국 I』, 돌베개, 213쪽.

이자 범통 주장의 근거였던 임정은 사실상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민당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1945년 12월 정계개편운동에서 큰 역할을 부여받았던 국민대회준비회의는 유명무실화되어 버렸고, 1945년 시기 광범한 정치세력을 망라하고 막대한 정치자금을 동원할 수 있었던 정당이었고, 12월에 이르러서는 자파 주도로 정계개편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던 한민당의 위상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김구가 주도하던 비상정치회의에서도, 이승만이 주도하는 독촉중협에서도, 그리고 비상국민회의에서도 한민당은 주도적 활동을 하지 못했다.⁴⁷⁾ 이승만과 김구가 주도하는 정치과정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모스크바 삼상결정에 따른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한 미국과 소련, 남북한 좌·우 정치세력의 갈등과 대립은 미소공위 개최 이전부터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우익세력이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의원으로 집결하는 사이 좌익세력들은 공산당이 주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족전선(이하 민전)으로 집결하였다. 중간적 정치세력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거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양 진영으로 갈라져 갔다.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조선민족혁명당 세력뿐만 아니라 1945년 12월 송진우 주도의 정계개편운동 과정에도 참여하였던 백남운을 비롯한 여러 계통의 좌익계열 인사들도 박헌영 주도의 공산당과의 심각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민전에 가담하였다. 심지어 한민당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정노식도 한민당을 탈당하여 민전에 가담한다.

정노식은⁴⁸⁾ 해방직후 1945년 9월 한민당이 결성될 때 적극 참여하여

47) 한민당의 김준연은 1946년 9월에 국민대회준비회를 회고하면서 “금년 2월 1일의 비상국무회의는 국민대회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었는 고로 그 사업은 실현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그 주도권과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진 것이었다. 김준연, 「국민대회준비회의 일년」 (하) 『동아일보』 1946. 9. 10.

48) 정노식은 1891년 전북 김제 만경면 출신으로 1910년대 일본 메이지대학 법과를 수학하고 제일조선인유학생학우회에서 활동하였다. 3·1운동 참여로 2년 여간 수

한민당 발기회의 지방부 책임자로 선임되기도 했던 당의 중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1946년 들어 한민당을 탈당하여 2월 1일자로 발표된 민전 준비위원 24인 중 1인으로 선임되었다.⁴⁹⁾ 2월 4일 민전 결성준비회가 인민당내 임시사무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창립대회를 위한 사무총국을 구성할 때, 한빈, 조한용 등과 함께 연락부 소속으로 발표되었고,⁵⁰⁾ 민전 결성 시에는 중앙상임의원 47명 중 1인으로 선임되었다. 한민당 탈당성명에서 “전 민족의 민주주의정권 건설에 있어서 한민당의 배타 독선적 태도를 수긍할 수 없어서 私情으로서는 석별키 어려우나 공적인 입장에서 탈당을 결의”한다고 주장하였다.⁵¹⁾ 정노식의 한민당 탈당은 한민당내 우파 사회주의 세력의 동향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한민당의 한계가 드러나는 최초의 과열이었다.

Ⅲ. 우익정당 통합운동의 전개와 한민당의 대응

1946년 2월 남한에서 민주의원과 민전이 별개로 결성되고,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미국과 소련의 미소공위 본회담이 1946년 3월에 예정되면서 남한 정계는 다시 한번 변화하기 시작했다. 비상국민회의 결

감되었다가 출옥 후 사회혁명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 창립에 관여한다.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설립운동에 참여하고, 조선청년연합회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한다. 1925년 이후 고향으로 내려가 사회주의 운동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생활하였고, 1940년 『조선창극사』를 간행하였다. 이진오, 2009, 「정노식의 행적과 조선창극사 저술경위」, 『관소리연구』 28, 355~368쪽.

49) 『자유신문』 1946. 2. 1.

50) 『자유신문』 1946. 2. 6.

51) 『자유신문』 1946. 2. 16.

성에서부터 민주위원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정국의 주도권을 가졌던 것은 미군정의 지지를 받은 이승만이였다. 임정이라는 기반과 광범한 대중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김구는 이승만에게 끌려다녔으며 2인자 역할에 머물렀다. 민주위원이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위치 지워지면서 장차 신정부를 배태하는 의회조직으로서 비상국민회의를 위치시키려던 김구 등 임정 주류세력의 의도도 실패로 돌아갔다. 때문에 김구는 민주위원 결성식에서도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서 민주위원보다는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부 위원회의 성립 사실만을 강조하여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⁵²⁾

민주위원이 결성되고, 임정 세력이 이에 참여하면서 임정은 정부로서의 권위가 사라졌고, 또한 독자적 정치세력으로도 유명무실화 되었다. 조선민족혁명당 등 임정내 좌파 세력이 이탈하면서 협동전선 조직으로서의 상징성과 조직적 실체도 사라졌다. 때문에 김구 등 임정 주류세력의 정치 활동은 임정이라는 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전개될 수도, 이에 의존할 수도 없었다.⁵³⁾ 때문에 그들은 입국 당시 정부로서의 권위를 높이고 내부 단합을 위해 유보되었던 한독당 활동을 재개하면서,⁵⁴⁾ 조직적 역량을 키워 차후를 바라보는 것이 불가피했다. 특히 김구 세력의 가장 기본적 기반인 한독당은 국내 기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전국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제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였다. 더불어 당의 외연과 대중 조직도 강화해야 했다.

1946년 2월 8일 이승만 세력의 독촉중협과 임정세력의 대중조직인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가 통합하여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하 독촉국민회)가 결성되었다.⁵⁵⁾ 독촉중협은 전국적 기반과 조직 역량이 미흡

52) 『조선일보』 1946. 2. 15.

53) 이용기, 앞의 논문, 189~190쪽.

54) 조경한, 1979, 『백강회고록』, 한국종교협의회, 368쪽.

55) 김보영, 1994, 『대한독립촉성회의의 조직과 활동』, 한양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5~6쪽.

했기 때문에 이승만은 독촉중협이 흡수당하는 형태로 독촉국민회를 결성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반발 등으로 4월 10일 개최된 독촉국민회 전국도·부·군지부장회의에 이르러서야 독촉국민회의로의 통합이 완료되었고, 초기에는 김구세력이 주도권을 가졌다.⁵⁶⁾

그러나 정치활동의 가장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정당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임정 세력이 국내 귀국 후 국내 기반을 위해 최초로 조직하고 적극 활동한 것은 주지하다시피 1945년 12월 6일 임정 내무부 산하에 결성된 정치공작대이다. 정치공작대는 지역사회의 유력 인사를 포섭하는 형태로 하향식으로 조직되었는데 1946년 2월에는 면단위에까지 조직을 결성하였다.⁵⁷⁾ 그렇지만 정치공작대는 임정 주류인 한독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던 임정 내무부장 신익희가 주도하면서, 그의 독자적 세력기반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정작 한독당의 전국적 기반을 확대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김구 등 한독당 세력들은 중앙 정계의 우익 정당들을 통합하는데 주력하였다.⁵⁸⁾

1946년 3월 20일 안재홍 등의 국민당이 한국독립당과 무조건 합동하기 위해 발전적 해소를 결의하였다.⁵⁹⁾ 안재홍은 1945년 하반기에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정당통합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이 정당결성에 대한 의사가 없자, 임정세력이 귀국한 후에는 한독당과 국민당간의 통합을 논의하였다.⁶⁰⁾ 그런데 제1차 미소공위 개최가 임박해지면서 임시정부 수립 문제가 가시화되고, 3월 18일 민주의원에서 발표한 ‘임시정책

56) 정병준, 2005, 앞의 책, 545~546쪽.

57) 박진희, 1996, 『해방직후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현실』 21, 176~177쪽.

58) 미군정은 김구가 정당통합운동에 나선 것이 임정이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Headquarter USAFIK, G-2 Weekly Summary, No 28 (1946.3.17.~24)

59) 『조선일보』 1946. 3.22.

60) 김인식, 2005, 『안재홍의 신국가건설운동』, 선인, 242~249쪽.

대강'이 국민당의 정책과 합치되면서 한독당과 국민당 간의 정강 정책 차이가 없어지자, 국민당이 한독당의 당명을 받아들이면서 전격적으로 한독당과의 통합을 결의하였다.⁶¹⁾ 3월 22일에는 안재홍 등 국민당 합당실행 위원들이 한독당 간부들과 회담한 후 무조건적인 합동선언을 발표하였다.⁶²⁾ 그러면서 우익 각 정당간의 정당통합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한민당도 우익 정당들 간의 합당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이었다. 사실 한독당과 한민당의 통합은 임정 귀국 시부터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한민당 주도세력에 의해 먼저 제기된 것이었다.⁶³⁾ 송진우는 양 당의 통합을 통해 좌익의 공산당에 대항하는 강력한 민족주의 우익정당 세력을 구축하려 하였다. 물론 1946년 전반의 상황은 1945년 말과는 판이하게 바뀌어 있었다. 한독당 세력과의 적극적 연대를 통해 임정 중심의 과도정부를 구성하려던 정계개편운동의 주도자인 송진우가 사라졌고, 한민당과 한독당의 연합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승만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었다. 통합도 한민당이 아닌 한독당이 주도가 되어 전개되고 있었고, 여기에 신한민족당과 국민당이 호응하는 형세이었다.

당시 한민당의 이론가이자 유력한 참모였던 장덕수는 '정당생리론'을 주장하면 통합을 밀받침하였다. 그는 좌익진영의 정당은 공산당의 주도 아래 모든 우당이 한 줄기 지령선상에 놓이게 되지만, 우익 진영의 정당은 인맥의 개성이 서로 달라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익 정당들 간의 공동전선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성냥갑의 집적에 불과하고, 공산계열의 통일전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력한 정당들이 하나의 깃발에 합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⁶⁴⁾ 이미 공산당 활동의 경험

61) 『한성일보』 1946. 4. 1.

62) 『한성일보』 1946. 3. 23.

63) 윤덕영, 2014, 앞의 논문, 269쪽.

도 있고, 수십 년간 공산세력과 대립하면서 활동하면서 축적된 그의 주장은 당시 한민당이 한독당과의 통합에 수동적이거나 미온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3월 26일 신한민족당에서는 김려식, 권태석, 최익한을 합동 교섭위원으로 선임하고, 정치이념이 동일할 것, 인적배치는 당원수 기준으로 비율제로 할 것, 합동은 양당 공동해체를 하고 당명과 정강, 정책 당규 등을 협의 결정할 것들을 합동의 3원칙으로 제시했다.⁶⁵⁾

3월 27일 오후 한독당의 김구, 한민당의 김성수, 국민당의 안재홍, 신한민족당의 김여식 등 각 당 대표와 한독당에서 조완구와 조경한이 상임위원 자격으로 합류하여 통합을 논의하였다. 3시간의 논란 끝에 당명은 한독당으로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한민당이 이승만을 총재로, 김구를 부총재로 할 것을 제의하고, 정강 정책 문제와 수뇌부 조직을 위시한 인원배치 문제를 당의에 부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독당은 중앙집행위원 다수가 아직 귀국하지 않은 관계로 인원배치의 당의 부의는 불가능하며, 이승만과 김구 양 영유를 옹호하는 한독당의 전통에 무조건으로 각 정당이 합동할 것을 요구하였다.⁶⁶⁾ 이는 한독당을 제외한 3개 정당이 무조건 해체하고 한독당 중앙집행위원회에 들어오는 합당 방식을 주장하는 것이었다.⁶⁷⁾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하였다.

4월 1일 한독당의 조소앙, 조완구, 조경한과 한민당의 김성수, 김병로, 백남훈, 김약수가 회합하여 통합을 논의하였다. 회합 소식을 기자들에게 전하면서 한민당의 선전부장 함상훈은 통합당의 명칭을 한독당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한민당 만의 해체 형식을 취해서는 합동할 수 없으며, 이승만을 총재로, 김구를 부총재로 하여 해내외 각 정당을 전부 합동하는

64) 이경남, 앞의 책, 349~350쪽.

65) 『한성일보』 1946. 3.29.

66) 『한성일보』 1946. 4. 1.

67) 『동아일보』 1946. 3. 30.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⁸⁾ 한편 김구와 김성수도 수 차례 별도의 회합을 가졌다. 그리고 당명과 당시를 고칠 수 없다는 한독당의 주장을 한민당에서 받아들이면서 무조건 합동이 표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독당 소장파에서는 합동 방식에 있어 당 대 당의 합당이 아닌 여타 정당들이 다 해체하고 개인자격으로 한독당에 입당해야 한다고 고집하였다.⁶⁹⁾

한편 한민당의 비주류인 진보파 김약수는 4월 4일 기자 담화에서 합당은 좋으나 한독당으로 흡수되는 형식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할 수 없으며, 당명과 정강정책 문제에서 한민당이 한독당을 무조건 추종할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근본적 문제에 미묘한 문제가 있어 통합에 대해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근본적 문제는 결국 인사문제에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⁷⁰⁾

한독당과 국민당의 통합 선언 이후 전개된 정당통합운동의 과정을 놓고 보면 당시 한민당이 통합을 내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나, 김약수 등 진보파만 통합에 적극적이었고, 김성수 등 당내 주류파는 소극적이었다는 판단은 선부른 것이다. 당명과 정강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점에서 한민당은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흡수 통합으로 통합이 진행되는 것, 그리고 간부 인선 문제에 있어서 한독당 독주에 대한 거부감이 앞의 함상훈과 김약수의 기자 담화에서 보이듯이 한민당내의 보수와 진보, 주류와 비주류를 막론하고 상당히 있었다.

4월 7일 4당의 교섭위원 각 3인씩이 경교장에서 모여 합당에 대한 최종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독당에서는 조소앙, 조완구, 조정환이, 국민당에서는 엄우룡, 백홍균, 김굉진, 한민당에서는 김성수, 김병로, 김약수가, 신

68) 『한성일보』 1946. 4. 2.

69) 『동아일보』 1946. 4. 5.

70) 『한성일보』 1946. 4. 6.

한민족당에서는 김려식, 권태석, 최익한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당명을 한독당으로 결정하고, 정강정책도 한독당의 3군제도와 국민당의 만민공화 대중공생의 이념을 구현하여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平權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한 독립당의 토지 국유를 당강으로 하되 토지정책은 민주위원의 임시정책대강의 토지정책에 의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민당과 신한민족당은 이를 무조건으로 그대로 추종하기로 결정하였다.⁷¹⁾ 그러나 간부 선임에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중앙위원은 각 당의 현 중앙위원을 그대로 받아 오백여 명으로 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되었다. 그렇지만 중앙 간부 인선에 있어서 한독당과 국민당으로부터 상임위원은 한민당과 국민당, 신한민족당은 각 9명씩, 한독당은 3명으로 하되, 중앙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한독당에서 내며, 14개부서 중 비서와 선전, 조직부는 한독당의 종전 인사기구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와 신설될 7개 분과위원회의 간부들은 각 3당의 간부들이 개인자격으로 한독당에 입당하여 나누어 담당하자는 안이 제안되었다.⁷²⁾ 각당 교섭위원들은 이 제안을 받아 각 당에서 가서 논의하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합의하였다.

4월 9일 신한민족당은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었으나 반대 의견이 대두하여 합당을 가결하지 못했다.⁷³⁾ 14일 열린 중앙상무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3당 합동을 잠정 결의하였으나, 반대파의 주장도 계속되었다.⁷⁴⁾ 한민당은 4월 9일 한민당 중앙집행위원회 개최하고 교섭위원의 보고를 들었으나, 한독당과 국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어 합당이 부결되었다.⁷⁵⁾ 김성수는 한민당내에서 송진우의 유지를 계승

71) 『한성일보』 1946. 4. 9.

72) 『동아일보』 1946. 4. 11.

73) 『한성일보』 1946. 4. 11.

74) Headquarter USAFIK, G-2 Weekly Summary, No 32 (1946.4.14. ~26); 『자유신문』 1946. 4. 16.

하려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한독당과 국민당의 제안을 수용하려 하였다. 당명을 한독당으로 하고 한독당의 정강정책을 계승한다는 것, 김구를 비롯한 최고간부 선임문제는 합당의 논란 사항이 아니었다. 문제는 각 당이 무조건 해체하고 개인 자격으로 한독당에 입당하는 것과 핵심 부서의 인사를 한독당이 독점하는 부분이었다. 이런 한독당의 제안은 한독당으로의 흡수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가장 강력한 정당이었던 한민당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한민당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런 반발은 단지 한민당내 주류파나 기득권 세력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4월 7일 최종 협의에 한민당 대표로 참가해서 잠정 합의를 한 것이 한민당의 대표인 김성수와 그와 가까운 동아일보계열·호남정치세력의 일원으로 당원로인 김병로였기 때문이다.

4월 18일 한민당을 제외한 3당과 일부 군소정당들의 합동이 결정되어 합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김구가 위원장으로 조소앙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렇지만 반발도 있었다. 19일에는 신한민족당내 합동 반대파들이 무조건 합동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합당에 불참하였다.⁷⁵⁾ 그리고 이를 토의하기 위한 당대회를 23일 개최하였다.⁷⁶⁾ 국민당내에서도 인사문제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 합동을 반대하는 여론이 지속되었다.⁷⁷⁾

한독당은 국내 조직 기반이 거의 없었음에도 임정의 여당이었던다는 전통과 권위, 그리고 반탁운동 과정에서 고조된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여타 정당을 흡수 통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김구는 4월 20일 「한국독립당원 전체 동지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을 통해 한독당이 무장투쟁과

75) 『동아일보』 1946. 4. 11.

76) 『동아일보』 1946. 4. 20.

77) 『동아일보』 1946. 4. 22.

78) 「민족정당 합동문제 제언」, 『한성일보』 1946. 5. 10.

의열투쟁의 영웅적인 투쟁의 기록을 갖고 있으며, 임정의 진용을 강화하고 독립군을 편성하는 등 수십년의 혁명 전통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를 확대 강화하는데 매진하고, 혁명역량을 한독당의 한길로 총집결할 것을 주장하였다.⁷⁹⁾ 그의 성명은 여타 정당을 한독당으로 흡수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었다. 국민당이 한독당의 무조건적인 흡수통합론을 지지했지만, 국민당과 한민당은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을 수 있는 정당이 아니었다. 8·15직후 일제하 국내에서 민족운동을 하였던 세력들 중 상당수가 한민당으로 합류한 것에 비해 국민당은 비교할 수 없는 열세에 있었다. 국민당은 한독당으로의 선제적 합류를 통해 이러한 열세를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했고, 한민당은 자신의 구축해놓은 세와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단일 정당으로의 통합이 3당 통합으로 결론나면서 한독당은 국내에 정당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우익내 가장 강력했던 세력인 한민당을 포섭하는데 실패하면서 그 기반과 영향은 제한적 이었다. 그리고 3당내에서도 반대 주장이 상당수 있는 불완전한 것이었기에 통합의 균열과 여진은 계속 되었다.

그러나 통합실패는 한민당내 김성수 지도체제의 균열도 그대로 드러냈다. 김성수는 당 수석 총무로서 당의 대표하는 입장이었지만, 그가 대표로 가서 받아온 통합 안이 당내의 논의과정에서 부결되는 수모를 겪었다. 당 대표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내 논의에 부결될 것 같으면 받아오지도 말고 회부하지도 말아야 했고, 받아왔으면 통과시켜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판단력과 정치력을 갖지 못했다. 더군다나 주류파의 유력 인물인 김병로도 같이 대표로 참석했기 때문에 그 타격은 더 컸다. 통합 부결 사태는 권위를 가지고 당을 이끄는 리더쉽이 한민당내에

79) 『한성일보』 1946, 4,21~22.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만 천하에 드러냈다. 송진우가 있었으면 나타나지 않을 현상들이 표면화되면서 한민당내 원심력은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제하에 연원을 가진 여러 정치세력의 연합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원심력의 요소가 내재화 되어 있던 한민당의 조직적 한계가 점점 더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김성수 지도체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가장 강력한 세력 기반을 가지고 있던 한민당과 민족운동의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던 한독당의 통합 불발은 양 세력 모두에게 이후 행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맺음말

이상에서 수석총무였던 송진우가 암살된 후, 초기 한민당이 어떠한 과정과 분란을 경과하면서 김성수 수석총무체제로 재편되었는가, 비상정치회의와 비상국민회의, 그리고 민주의원이 조직되는 일련의 정치과정에 한민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는 무엇인가, 한독당 중심의 우익정당 통합운동에 한민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그를 둘러싼 내부 분란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재편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송진우가 죽자 당권을 둘러싸고 당내 분란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한민당의 비주류인 우파 사회주의 세력과 진보적 민족주의 세력들의 대표적 인물로 임시 당대표를 맡고 있던 원세훈이었다. 1946년 1월 8일 한민당은 자기 당대표가 합의한 4당 커뮤니케를 부인하는 성명을 서둘러 발표한다. 이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이 4당

코뮤니케를 3상 회의 결정에 대한 ‘전면적 지지’로 선전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민당의 당권 향배와 관련하여 임시 당대표였던 원세훈에 대한 견제도 있었다. 한민당은 김성수를 송진우 후임 수석총무로 본인의 사전 양해 없이 선임하였는데, 한민당 주도세력인 김병로 등을 비롯한 일제하 이래 동아일보 계열과 호남출신 인물들은 김성수를 설득하면서 타 계파나 인물들의 당권에 대한 도전을 적극 대응하였다. 김성수의 취임으로 송진우 사후 당권을 둘러싼 한민당의 내분은 봉합되었다. 김성수는 정치자금 문제 해결 능력이나 정치 리더십에 있어 가장 무난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일제하에서 정치 사회운동에 거의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능력과 경험이 떨어지는 김성수는 송진우가 가졌던 정치력과 리더십, 추진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한편 모스크바 삼상결정에 따른 임시민주정부의 수립과 이를 위한 미소공위의 개최가 가시화 되면서 정계개편운동은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한민당 주도세력이 추진하던 1월 10일 국민대회 자체는 무산되었지만, 우익세력 주도하에 정치세력을 단일한 세력으로 결속시키려는 흐름이 무산된 것은 아니었다. 가장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간 것은 임정주류 세력이었다. 김구는 1946년 1월 4일 비상정치회의 소집과 임정 확대 강화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구상은 각계각층 대표를 망라한 비상정치회의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임정의 직접적 확대 강화로만 제한해 버리는 위험성을 갖고 있었고, 임정의 범통만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국내 기반이 미약하고 미군정에 독자적으로 대항할 힘이 거의 없는 그들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었다. 당시 한민당의 구상은 임정 주도세력이 추진하는 비상정치회의의 소집을 지지하고, 여기에 이승만의 독촉중협을 합류시켜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승만은 한민당에 불평을 토로했다. 한민당은 독촉중협 회의록을 이승만을 설득하는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반면, 이승만은 이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력

1946년 전반 한국민주당의 재편과 우익정당 통합운동

을 복원하려고 하였다. 이승만은 한민당의 만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독촉 중협을 독단적으로 비상국민회의로 개칭하였다. 그 후 비상정치회의와 독촉중협이 통합하여 비상국민회의로, 다시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원회가 민주의원으로 전환되었는데, 이승만은 미군정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주도했다. 이를 통해 1945년 12월 우익 진영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고립되었던 이승만이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임정 주도세력은 반탁운동의 높은 열기를 바탕으로 한민당과의 협력을 파기하고 독자적인 정계통합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과 주도로 정계 계편 운동을 전개할 만큼 1945년 우익 중에 가장 강력한 정당이었던 한민당의 존재감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승만과 김구가 주도하는 정치과정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한민당 간부였던 정노식의 탈당은 한민당내 우파 사회주의 세력의 동향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한민당의 한계가 드러나는 최초의 파열이었다.

민주의원이 결성되고, 임정 세력이 이에 참여하면서 임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기반이 거의 없었던 한독당의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게 되었다. 더불어 당의 외연과 대중 조직도 강화해야 했다. 제1차 미소공위가 임박해지면서 임시정부 수립 문제가 가시화되고, 민주의원에서 발표한 ‘임시정책대강’이 국민당의 정책과 합치되면서 국민당이 한독당과의 무조건 통합을 선언하였다. 한민당도 우익 정당들 간의 합당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이었다. 사실 한독당과 한민당의 통합은 임정 귀국 시부터 송진우에 의해 먼저 제기된 것이었다. 그러나 1945년과 달리 1946년 통합의 주도는 한독당이였다.

통합교섭 과정에서 한독당은 한민당과 국민당, 신한민족당의 3개 정당이 무조건 해체하고 한독당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식을 주장하였다. 한

독당은 임정의 여당이었다는 전통과 권위, 그리고 반탁운동 과정에서 고조된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흡수통합을 밀어부쳤다. 이에 대해 한민당은 당명과 정강정책에 대해서는 한독당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였지만, 흡수 통합과 간부 인선에 있어 한독당 독주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였다. 최종 협의때 한독당과 국민당은 각 당이 무조건 해체하고 개인 자격으로 한독당에 입당하는 것과 핵심 부서의 인사를 한독당이 독점하는 부분을 제안하였다. 한민당 대표였던 김성수와 김병로 등이 이를 받아와 한민당 중앙집행위원회에 회부하였지만 부결되었다. 한민당은 자신의 구축해놓은 세와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런 반발은 단지 한민당내 주류파나 보수 세력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고, 비주류 및 진보 세력도 비슷하게 있었다.

단일 정당으로의 통합이 3당 통합으로 결론나면서 한독당은 국내에 광범한 정당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3당내에서도 반대 주장이 상당수 있는 불완전한 통합이었기에 통합의 균열과 여진은 계속되었다. 무엇보다 우익내 가장 강력했던 세력인 한민당을 포섭하는데 실패하면서 한독당의 기반과 영향은 제한적 이었다. 한편 통합실패는 한민당내 김성수 지도체제의 균열도 그대로 드러냈다. 김성수는 당 수석 총무로서 당의 대표하는 입장이었지만, 그가 대표로 가서 받아들인 통합 안이 당내의 논의과정에서 부결되는 수모를 겪었다. 더군다나 주류파의 유력 인물인 김병로도 같이 대표로 참석했기 때문에 그 타격은 더 컸다. 통합 부결 사태는 권위를 가지고 당을 이끄는 리더십이 한민당내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

우익 3당 통합을 통해 남한 우익 정당은 한독당과 한민당으로 크게 재편되었으나, 이승만 세력은 여전히 독자적 정당을 추진하지 않고, 한민당을 비롯해서 각계에 폭넓게 퍼져있었다. 미소공위에 대응해 김구와 한독당이 중앙 정치 조직 결성에 몰두한 것에 반해, 이승만은 미군정의 적

1946년 전반 한국민주당의 재편과 우익정당 통합운동

극적 지원 하에 소위 남선순행을 통해 전국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대중적 기반과 영향력의 한계를 적극 타개하기 시작한다. 한편 미군정은 김구와 한독당에 대한 불신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민주위원의 실패를 통해 미소공위에 대비한 중도세력을 육성하기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1946년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과정, 즉 미소공위의 개최와 휴회, 좌우합작운동의 전개와 좌우합작위원회 설립, 좌우합작운동에 대한 좌우익의 대응과 좌우합작 7원칙의 발표, 과도입법의원 선거 등의 정치과정을 거치면서 1946년 전반 균열 조짐을 보이던 한민당은 결정적 재편 과정에 놓이게 된다. 더 나아가 1945년 정립한 당의 이념과 성격도 크게 변화하면서 한민당은 1945년과는 상당히 다른 정당으로 재편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고찰은 추후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사료

- 『동아일보』, 『매일신보』, 『서울신문』, 『신조선보』, 『자유신문』, 『조선일보』, 『중앙신문』, 『한성일보』, 『삼천리』, 『신생공론』
- 국사편찬위원회편, 1966, 『자료대한민국사』
- 국사편찬위원회편, 1994, 『대한민국사자료집 18: 주한미군정치고문문서』 1.
-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편, 1983, 『민세안재홍선집』 2, 지식산업사
-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1998, 『(이화장소장)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13권, 중앙일보사 현대한국학연구소
- 조선인민당편, 1946, 『인민당의 노선』, 신문화연구소,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46. Far East Vol. VIII,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Headquarter USAFIK, G-2 Periodic Report, 1989, 『주한미군 일일정보 요약』,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 Headquarter USAFIK, G-2 Weekly Summary, 1990, 『주한미군 주간정보 요약』 1권,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 논저

- 강만길·성대경 엮음, 1996, 『한국 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 김보영, 1994, 『대한독립촉성회의 조직과 활동』, 한양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인식, 2005, 『안재홍의 신국가건설운동』, 선인
- 김재명, 2003, 「올 곧은 민족정신 지닌 시베리아 투사」, 『한국현대사의 비극』, 선인

1946년 전반 한국민주당의 재편과 우익정당 통합운동

- 도진순, 1997,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이승만·김구 시대의 정치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진희, 1996, 「해방직후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현실』 21
- 박태균, 1994 「해방직후 한국민주당 구성원의 성격과 조직개편」, 『국사관논총』 58집
- 서중석, 1991 『한국현대 민족운동연구-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 송남현, 1975 『해방30년사 1』, 성문각
- 송남현, 1990, 『시베리아의 투자 원세훈』, 천산산맥
- 심재욱, 2007, 「설산 장덕수의 정치활동과 국가인식」, 동국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심지연, 1982 『한국민주당연구』 I, 풀빛
- 심지연, 1984 『한국현대정당론-한국민주당연구 II-』, 창작과비평사
- 윤덕영, 2000, 「1946년 전반 좌익세력의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대응과 ‘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구상」, 하현강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편,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 해안
- 윤덕영, 2010, 「8·15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적 한계와 좌·우 분립의 배경」 『사학연구』 100
- 윤덕영, 2010, 「일제하·해방직후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과 국가건설노선」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윤덕영, 2011, 「1945년 한국민주당 초기 조직의 성격과 주한미군정 활용」 『역사와현실』 80
- 윤덕영, 2011, 「송진우·한국민주당의 과도정부 구상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지론」 『한국사학보』 42
- 윤덕영, 2011, 「주한미군정의 초기 과도정부 구상과 송진우·한국민주당의 대응」 『한국사연구』 154
- 윤덕영, 2014, 「미군정 초기 정치 대립과 갈등 구조의 중층성-1945년 말 한

국민주당 주도세력의 정계 개편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5

이경남, 1981, 『설산 장덕수』, 동아일보사

이용기, 1997, 「1945~48년 임정세력의 정부수립 구상과 임정법통론」, 『한국사론』 38

이진오, 2009, 「정노식의 행적과 조선창극사 저술경위」, 『관소리연구』 28

인촌기념회편, 1976, 『인촌 김성수전』, 인촌기념회

전성호, 2012, 「해방 이후 원세훈의 좌우합작운동과 정치활동」, 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정병준, 2005, 『우남 이승만연구』, 역사비평사

정용욱, 2003 『존 하지와 미군 점령통치 3년』, 중심

정용욱, 2003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조규태, 2012, 「원세훈의 임시정부 수립·변혁 활동과 민족유일당 운동」,
『승실사학』 29

조경한, 1979, 『백강회고록』, 한국종교협의회

최선웅, 2013, 「장덕수의 사회적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활동」, 고려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최선웅, 2014, 「한국민주당의 미소공동위원회 대응과 활동」, 『한국사학보』
54

Abstract

Reorganization of the Korea Democratic Party and unified movement of Right-Wing political party in the early half of the 1946

Yoon, Duk-young

The aim of this study is as follow. After the assassination of Song Chin-woo, who led the early Korea Democratic Party(KDP) as a senior secretary, KDP has been down over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and any distraction to the chief secretary Kim Song Soo system, how did the KDP respond specifically to a series of political process in early 1946, what are the limits of KDP revealed in the process, how to respond Korea Independence Party(KIP) in the center of the unified movement of Right-Wing. Was that the point went through a process of distraction around him KDP how the reorganization.

After the death of Song Chin-woo, infighting broke out around the political power of the KDP. Won Seihoon was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he has been temporary secretary and representative figures of progressive nationalist forces of Right-wing Socialists forces as a subcultures of the KDP. As the dispute within the party was ending as the chief secretary Kim Songsu. Early political process in a series of 1946, Rhee Syngman was brilliantly revived while performing a leadership role with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led forces have tried their own political integration on the basis of high movement of against Trusteeship, and eventually fails. Phase was the most powerful right-wing parties KDP was rapidly shrinking.

The first American-Soviet Joint Commission nearing and be visible establish a provisional government issues, unified movement of Right-Wing were deployed around the KIIP. KIP claimed the absorption and integration of the three political parties KDP, Nationalist Party, New Korea Nationalist Party. KDP was however in favor of the party name and platform for policy, but opposition was integrated absorption and was contrary to the claims of senior executives of the KIP. Opposition was not just a limited number of reader forces and conservatives within the KDP and It was also similar to non-reader forces and progressive forces. Kim Songsu has exposed the limitations of leadership in the unified movement of Right-Wing process.

Keywords: Korea Democratic Party, Korea Independence Party, Nationalist Party, Kim Songsu, Kim Byungro, Won Seihoon, Kim Koo, Rhee Syng-man